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5가지 대선 정책 제안서

2021년 12월

광주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발굴위원회
(062-514-2470)

대선 정책이 갖추어야 할 방향

첫째,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환경위기에 직면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목표이자 가야할 길임

- 2050 국가 탄소중립보다 5년 빠른 2045 광주 탄소중립 성공은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임,
-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과 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
- 정부 각 부처에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위임을 강화함
-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실현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지역별 특화전략 추진

둘째, 대선정책과 공약은 지역발전을 넘어 전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

-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의 생존전략이 함께 녹아있는 철학적 공약 필요
- 개발 공약은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시민의 삶을 고려한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해야 함.

셋째, 물적 자본과 함께 여성, 청소년, 고령자 등 다양한 세대의 역량강화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

- 경제적 측면의 이익 위주의 공약에서 벗어나 생태, 환경, 지역적 맥락(역사, 문화, 전통)을 고려
- 궁극적으로는 지구환경과 국제사회질서에 부합

넷째, 물적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는 집중하거나 과다하지 않아야 함

- 국가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위한 문화, 교육, 환경생태 자본을 강화함으로써 일 자리를 준비하는 투자
- 도로와 철도는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단일기능에서 벗어나 다기능의 인프라가 되도록 계획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5가지 대선 정책

1. 한국 탄소중립의 바로미터가 되는 광주, 탄소중립시범도시 지정 및 운영

1.1 탄소중립시범도시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2021.9.24.) - 2045 광주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
1.2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신설 및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을 광주에 설치
1.3 제로에너지건축시범 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로에너지건축시범사업 지역으로 광주 선정

2. 광주 중앙공원의 국가도시공원지정,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 설립

2.1 중앙공원 : ‘도시자연생태형’ 국가도시공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원 조성이후, 280만㎡에 달하는 중앙공원이 도시의 녹지축이자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 지정 - 국가의 도시공원관리체계 마련,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주민등의 공원거버넌스 구축
2.1.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실효성있게 개정 : 기준 면적 조정과 공원 관리·운영의 국비 지원 -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의 유형을 발굴 -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따른 부지매입과 관리운영 지원 체계 마련

3.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광주천 복개하천 복원

2.1 양동상가 복개하천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동상가의 경우 2020년 홍수 발생을 고려, 치수 대책 측면의 복개 복원 필요. - 복개하천복원 타당성 재조사(※ 2016년 타당성 조사)
2.2 지류하천 생태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계천 : 도시재생, 아시아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복원사업 - 용봉천, 서방천, 경양지천, 극락지천 등 복원을 통해 도시의 회복력 높임.

4. 영산강 수질과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

3.1 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지 면적이 446천㎡(약 135천평)에 달하여 하수처리장 상부 공간을 복개 혹은 지화화하여 지상을 공원으로 조성, - 공원화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인식 개선, 도시경관향상과 도시 열섬현상완화
3.2 광주천 하류 인공습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하천인 광주천 수량의 70%이상인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개선 -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처리하기 위한 인공습지 조성 - 인공습지의 처리용량 약 20만㎡/일(체류시간 3일)이상으로 군공항 수변공원의 습지와 연계

5. 광주공항 이전적지의 융복합도시 개발

5.1 옛 하천부지의 무상양여를 통해 구하도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공항조성시 매립된 하천부지를 광주시에 무상양여 -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지점의 배후습지와 구하도 복원
5.2 저밀도 융복합도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밀도 친환경 “산업&주거&휴식 융복합 도시” 조성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 - ‘탄소중립시범도시’, ‘국가탄소중립진흥원’, 제로에너지건축시범지구지정

1. 배경 및 목적

-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 탄소중립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정책수립과 예산지원의 법적근거가 마련됨
- 광주광역시는 ‘2045 AI-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함
- 정부가 추진 예정인 탄소중립 시범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정책과 전략 수립, 이행을 위한 지역의 행정 조직 개편, 예산 수립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2. 주요 내용

1)탄소중립시범도시지정

-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한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 비율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각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기술적용, 시민참여 등 다양한 사례 발굴이 가능함.
- 광주광역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여 실제로 2045년에 탄소중립을 달성케 함

2)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신설 및 설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의해 시·도 지사는 조례를 제정하여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
-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시·도 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각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설립 필요
- 국가탄소중립진흥원을 신설하고 이를 탄소중립도시 광주광역시에 설치

3) 제로에너지건축시범 지구 지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 녹색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 주거환경개선, 도시재생, 그린리모델링,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녹색건축물이

체계적인 계획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 지구 지정

- 다양한 크기, 형태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로에너지건축지원센터 설립

3. 추진방안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지정, 지원 제도로 확장
- 국가 차원의 국가탄소중립진흥원(가칭) 신설 및 광주 설치, 탄소중립진흥원은 시·도 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노후화 건물이 많은 지역을 제로에너지건축시범지구로 지정하여 단계적 이행 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여, 사회적약자 거주 주택 및 공동·공용시설 등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리모델링
 - 신규 택지조성 지역, 도시재개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리모델링 및 신축을 의무화하는 시범지구 확대

1. 제안 배경 및 목적

- 도시의 부족한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에 대한 공원녹지 제공을 원활하게 할 취지로, 도시공원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포함하여 국가가 직접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근거가 마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6년 3월 개정)과 시행령 마련
-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으로 300만㎡ 이상의 도시공원 중 지자체가 부지매입을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기 불가능한 무의미한 법이 되고 있음
- 면적 위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한 국가도시공원 시행령 기준을 개정하고 유형과 공원개발내용을 다양화하여 도시의 중요한 부지, 시민의 삶에서 꼭 필요한 공간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국가가 토지매입과 개발과 관리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함.
- 중요 도시공원과 유휴공간,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의 생태 회복, 공원 서비스의 확장, 환경·문화·역사의 보전 관점에서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기반이 되는 공공성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지원

2. 주요 내용

1) 중앙공원 : 도시자연생태형 국가도시공원 지정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정 실효 만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인근 주민의 생활권 공원의 기능뿐 아니라 대형공원인 중앙공원은 광역적 공원 기능을 수행
- 금당산, 짚봉산, 마륵공원 등 인근 공원녹지 연계를 통해 녹지축이자 생물다양성 확대의 기능을 수행
- 기존의 수목관리 중심의 공원관리에서 광역공원으로서 기능 수행을 위해 공원이용프로그램, 공원의 관리 등의 예산 책정 필요
- 중앙공원은 도시자연생태형 국가도시공원 유형으로 지정, 국가도시공원 운영센터 설치 필요

2)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 설립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국가의 역할 재규정
-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가도시공원의 유형과 토지매입, 조성, 관리 운영에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 명기
- 국가도시공원 지정, 조성, 관리를 위한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국가) + 국가도시공원센터(지방) 설립 지원
- 국가도시공원센터에서는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의 환경보전과 생태적 다양성 확보 전략을 연구하고 공원방문자센터 운영
- 도시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사업 지원
-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공원 방문자센터를 생활 SOC화함으로써 도시공원이 도시재생과 활성화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국민공감대 형성

3. 추진방안

- 도시공원 중 일부는 규모가 커서 조성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는 추진하기 불가능함.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조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도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관점에서 국가의 역할 부여
- 초기에 국가도시공원추진단을 설립하여 면적 기준으로 규정된 국가도시공원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양한 국가도시공원 유형을 중앙 정부가 선도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규모와 국가 역할을 정비하여 토지매입은 국가가, 조성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협력체제를 구축
- 운영관리 : 국가도시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해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형의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인 발전역량을 스스로 형성함

1. 배경 및 목적

- 광주천 본류 양동상가 구간을 비롯해서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지류하천들이 복개되어 광주천의 수질 및 생태환경 악화의 원인이 됨.
- 양동복개구간을 비롯해 광주천 12km가 국가하천으로 관리(2020년 1월 1일)
- 양동복개구간은 국지성집중호우로 자연재해발생, 구조물의 노후화, 하천기능 상실, 수질 오염 가속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양동복개구간 복원을 통해 광주천 및 영산강의 수질 및 생태 복원 도모

2. 주요내용

- 주요 대상 : 광주천 본류 양동상가 복개구간을 복원하고, 지류하천인 용봉천, 서방천, 경양지천, 극락지천, 동계천, 소태천 등으로 하천 복원사업 진행
- 양동상가 복개구간은 연장 300m, 교량식으로 1970년 복개공사가 이루어짐.

3.추진방향

- 양동상가의 현대화를 포함해 각 하천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구를 마련
- 양동상가의 경우 2020년 홍수 발생을 고려해 치수대책 측면을 강조한 타당성 재조사 필요(※ 2016년 타당성 조사)
- 지류하천의 경우 시범하천 및 구간을 선정해 주민참여형 생태복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모델사례를 만들고 인근 하천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함

1. 배경 및 목적

- 영산강은 상류에 농업용댐이 건설된 이후 하천유지수량이 부족하고, 광주시를 관류하면서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전국 4대강 중에서 수질이 가장 나쁜 강의 오명을 안고 있음
- 2008년부터 추진한 보 건설 등 4대강사업으로 하천 연속성 상실, 건강성 악화 문제가 컸음. 이로 인해 보 개방 시행과 상시 개방(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 등의 정책결정은 하였으나, 시행이 더디 진행되고 있음.
- 또한 광주 도심을 관류하는 광주천은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음.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 유지수량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 수질을 크게 개선하지 못함

2. 주요 내용

1)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처리 인공습지 조성

- 갈수기에 광주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유량이 광주천 유량의 70% 이상을 차지해 광주천 수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개선이 시급한 과제임
- 광주하수처리장 오염부하비율 : BOD 18.3%, T-N 83.1%, T-P 22.1% 각각 증가
- 인공습지의 처리용량 약 20만^m³/일(체류시간 3일)
- 인공습지에서 재처리된 방류수를 수로를 통해 광주군공항 수변공원의 습지와 연계

2) 광주하수처리장 생태공원화

- 광주하수처리장은 지리적으로 광주시의 중앙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상무 신도시와 인접해 환경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공원화가 요구됨
- 시설부지 면적이 446천^m²(약 135천평)에 달하여 상부 공간을 복개해 공원화할 경우 녹

지면적의 증가 효과가 크며, 생태숲 확보를 통해 도심 열섬현상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추진 방향

- 광주천, 영산강의 수질개선,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및 녹색 생활공간의 창조 등을 위해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규모 인공습지 조성
- 인공습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등 생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의 확산과 함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주변의 도시화됨에 따라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화진행

1. 배경 및 목적

- 광주공항 이전적지 약 250만평 규모로 공항이전적지의 개발 방향에 대한 계획과 정책 수립 필요
- 광주 높은 주택보급율 예정에 따라 주거위주 도시개발 곤란
(광주공항, 공항주변지역, 전남일신방직, 금호타이어 등 대규모 이전적지 제외한 2030년 주택보급율 120% 예상)
- 공항이전 재원 마련과 높은 주택보급율 문제 해소를 위해 주거 위주 도시개발보다는 주거와 함께 상업·업무, 미래산업, 위락, 자연휴식 기능이 융복합된 도시개발 방향 설정 필요
- 특히 광주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육성과 광주 대도시권을 대표하는 자연생태보호를 강조하는 시민자연휴식 거점공간 조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 설정
-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광주군공항 이전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임. 광주군공항은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지점의 배후습지상에 위치했으며, 공항 조성 과정에서 광활한 하천부지가 편입되고 구하도 습지도 훼손되었음
-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지점의 부지특성상 하천습지보호기능을 포함한 자연녹지나 공원 비중을 50% 이상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
- ‘100만평 광주시민대공원, 20만평 영산강·황룡강 하천습지보호지역’ 설정

2. 주요 내용

1) 광주군공항 종전부지내 하천부지 양여- 100만평 시민대공원 조성

- 광주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시 구 하천부지를 포함해 대규모 수변공원 및 습지를 조성해 수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위기 대응공간으로 활용
-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조성 이전의 하천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토지를 중앙정부가 광주시에 무상 양여할 필요. 광주군공항 조성시 훼손된 영산강과 황룡강 합류지점의 배

후습지와 구하도 복원

- 무상 양여된 종전 하천부지를 포함해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수변공원 및 하천습지생태 공원을 조성

2) 친환경 저밀도 스마트융복합도시 조성

- 광주공항 이전적지는 기본적으로 주거위주 도시개발보다는 광주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육성과 광주 대도시권을 대표하고 자연생태보호를 강조하는 시민자연휴식 거점공간 조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 설정
- 저밀도 친환경 “산업&주거&휴식 융복합 도시” 조성
- 주거용지는 10%~20% 내외 (전원형 저밀 주택단지 위주 입지)/상업업무용지 5% 내외 /스카트생태산업단지 10~20%내외/50% 이상 공원·녹지·습지 (100만평 규모 광주 시민대공원)

3. 추진방안

- 광주공항 이전적지 도시개발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
: 광주공항 이전적지는 기본적으로 주거위주 도시개발보다는 광주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육성과 광주 대도시권을 대표하는 수변공원 조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방향 설정
: 대규모 공원 녹지 확보+친환경 저밀 주택단지 등 새로운 주거형태의 전면 도입 +도시미래
: 먹거리산업의 육성 + 대규모 공항이전재원마련 - 환경도 지키면서 광주 미래 지역경제도 살리는 도시개발방안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정부차원의 광주공항 이전대책 마련시 공항 이전적지 활용방향 설정과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TF팀 병행 운영. 이전 재원 규모 추정과 도시개발의 상관성 논의
- 100만평 시민대공원 포함 광주공항 이전적지 개발방향 설정과 공항이전적지 병행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약속